

“인화단결·공정관리·정도 운영에 최선” 제24대 회장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에 이종세 회우(수석부회장)가 당선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0차 총회 및 선거에서 참석 회우 166명 중 130명의 지지를 받은 이종세 회우를 새 회장



이종세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왼쪽)이 이병대 선거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표. 제24대 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마권수, 이충남 회우가 총회의 인준을 거쳐 감사로 선임됐다.

이종세 회장은 1976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체육부장, 스포츠동아 이사를 지냈다. 또한 대한유도회 부회장,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장 및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장,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4대 집행부



이병대
고문



박기병
고문



장석영
명예회장



이충남
감사



마권수
감사



유한준
부회장



정재필
부회장



서옥식
부회장



이향숙
부회장



김두호
부회장

<2면에 계속>

제24대 회장 선거 결과

이종세 후보 130 표
황우연 후보 33표

으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황우연 후보는 33표를 획득했다. 무효 3

“회원들 복지향상 - 여론 지도에 앞장 설터”

이종세 회장 취임사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원단에 존경하는 선후배 회우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기대 속에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 그리고 대내 평안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언론인회의 설립 정신인 ▲전·현직 언론인들의 친목 도모 ▲원로 언론인들의 복지향상 ▲여론 지

도 및 국가에 대한 기여 등 3대 가치를 이어받아 성실히 수행하면서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AI시대에 대비, 분열보다 통합, 갈등보다 화합으로 회우 모두의 언론인회로 거듭나도록 소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와 나, 좌우로 갈라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의 언론인회, 통합의 언론인회, 전진하는 언론인회, 회우 여러분의 언론인회, 활기 넘치는 친목의 언론인회가 되도록 우

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선후배 회우들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언론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고를 경청하면서 손과 손을 맞잡고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언론문화를 구축하는데 열정을 쏟겠습니다. 후보 공약으로 천명한 ‘인화단결·공정관리·정도운영’의 3대 목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

복지향상과 진료해택 증진, 애경사 참여 확대▲집행부 위주에서 벗어나 회우 중심 운영, ▲본회의 얼굴인 대한언론 회보의 편집 체계 개편, ▲각 분과위원회 정비 등 조직혁신, ▲투명한 회계와 법인카드 사용 등 제비용 합리화 등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엔 본회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언론문화를 창조 견인하는 대한언론인회로 우뚝 섭시다. 희망을 가득 싣고 달려가는 지혜로운 준마(駿馬)처럼 우리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취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들 격려와 협력 감사합니다

장석영 회장 이임사

존경하는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

3년 전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으로 취임하며 저는 우리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3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임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큰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입법·행정·사법 전 분야에서 여러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걱정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입법 과정과 사법제도의 개편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이 앞서는 현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언론인회는 흔들리지 않고 정론직필(正論直筆)로서 많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유튜브 방송 KjtV를 개국하고 인터넷뉴스 Knews를 창간하여 정보 전달의 폭을 넓혔고, 라오스와 일본 언론계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대



한언론인회의 대외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는 모두 회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관계자들의 헌신 덕분에 이루어진 값진 성과입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회우의 자리로 돌아가 앞으로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을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대한언론인회가 더욱 큰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드림

대한언론인회 24대 집행부



박종서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김 화
이사



한양인
이사



조희곤
이사



이재권
이사



김용발
이사



김동철
이사



김사모
이사



신대남
이사



송종문
이사



전인식
이사



민경완
이사



유자효
이사



이도선
주필



송창기
편집국장

위원장



한영섭
원로상임위원회



정형수
자문위원회



이재호
신문편집위원회



최명우
유튜브방송위원회



김사모
인터넷신문제작
위원회



이도선
논설위원회



박종서
기금관리위원회



김용발
기획사업위원회



봉두완
국제교류위원회



박문두
후생복지위원회



김성녕
회원자격상별심사
위원회



이원창
대외협력위원회



이용화
행시집행위원회



최금녀
여성위원회

〈2026년1월 2일부〉

대한언론인회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후생·친목
- 언론관계 연구·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마무리씨 권영섭



‘새해에 바란다’ - 정치분야

내란몰이 맞들인 이정권 ‘무한폭주’

6·3지방선거서 民心 준엄한 회초리 들어야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새해가 밝으면 누구나 이런저런 희망을 품게 마련이다. 몹시 어려운 한 해를 지난 뒤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 정치도 지난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뒤따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치는 새해에도 희망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이젠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내란몰이’로 정국의 난맥상이 지속될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몰이를 6·3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고, 여차하면 정권 내내 우려먹으며 우파를 궤멸시킬 작정이다.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 ‘현대판 사화(士禍)’로 불린 문재인 정권의 자칭 ‘적폐 청산’은 저리 가라다.

내란몰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시작됐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에 의한 국정 마비를 해소하고 부정 선거 의혹을 파헤치려고 계엄을 선포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편법으로 통과시켰다. 내란이 주요 혐의의 지목됐다. 그러나 총성 한 방 없고 사상자 한 명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엔 많은 무리가 따랐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은 반정부 세력이 폭력으로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내란과 구분된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짝짜미로 내란 혐의를 배제한 것도 그래서다. 결국 현재는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오염된 증인과 증언 등을 토대로 탄핵을 인용했다.

또다시 부정 선거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말쑥 헛말이고 오로지 내란몰이에 집착했다. 탄핵 심판에서 제외된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계엄=내란’을 미리 못 박았다. 대선 전부터 국민의 힘을 ‘내란잔당’으로 몰아붙이더니 집권하자마자 특검을 3개(내란·외환, 김건희, 채 해병)나 가동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온갖 압력을 가하는가 하면 명칭도 괴이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내란몰이에 박차를 가했다. 75만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익명의 투서와 제보로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공산당식 발상에 기함할 지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6개월 내내 ‘내란몰이’에 집착하면서 국민을 분열시켜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빚었다.

수출 정체·물가·부동산 폭등 외면...정치보복 몰두

특검들이 6개월 안팎에 걸쳐 살살이 훑고 털고도 별 성과가 없고 내란 재판도 여의치 않자 이 정권은 지난 달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내란몰이 정국’을 끝없이 펼치겠다는 얘기다. 내란몰이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상승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위험 논란이 제기되도 막무가내다. 속셈은 뻔하다.

선거에 유리하고 야권 분열에도 한몫 단단히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도 내란몰이로 재미 봤지만 올해 최대 정치 행사인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도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야당이 계엄 성격 규명 등을 둘러싸고 당의 정체성과 투쟁 노선에 갈등을 빚으며 심각한 내분에 휩싸인 것도 더없는 호재다.

문제는 이 정권이 야당 때려잡기에 골몰하는 통에 나라가 결판나고 민생이 죽어난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반년이 넘도록 국민 갈라치기 말고는 해 놓은 게 없다. 수출과 성장은 정체됐고, 부동산 폭등은 문 정권 때의 재앙을 이미 넘어섰으며, 환율 폭등 등에 따른 물가고로 서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마구잡이 돈풀기로 나랏빚이 급속히 불어나자 세계통화기금(IMF)은 국가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리 인상과 함께 민간 투자 및 소비 위축을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팩트 시트(요약서)를 놓고 양국의 말이 달라 정부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고,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대북 평화 담론으

로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키우는 등 외교·안보 분야도 엉망이다. 군·검찰 개편은 국익을 도외시한 정치 보복의 냄새가 짙게 배어난다.

지난달 생중계된 각 부처와 공공기관 업무 보고로 드러난 이 대통령의 가볍고 위험하고 치졸한 인식 수준은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에선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제쳐 놓고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에선 역사학계가 이미 위서(偽書)로 규정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왜 연구하지 않느냐며 “한빠”를 들먹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선 전 정권 때 임명된 사장을 노골적으로 핀잔하며 외화를 책갈피에 끼워 밀반출하는 방법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 공범인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당시 사용된 수법이라 “자기 고백”이란 비아냥을 자초한 꼴이다. 외교부와 통일부에선 “국민이 빨갱이 될까 봐 노동신문 못 보게 하느냐”는 엉뚱한 질문으로도 모자라 “북쪽이 남쪽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황당한 말로 논란을 키웠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사고니 예삿일이 아니다.

이 정권은 입법부·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해 독재 체제를 온전히 굳히려는 야욕에 눈멀어 위헌 논란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본다.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공수처 수사 확대)’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정보 유포자 처벌, 필리버스터 제한)’ 등을 물 불 안 가리고 밀어붙인 배경이다. 이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가 나설 때다. 6·3 지방·보궐선거가 좋은 기회다. 소중한 한 표로써 민심의 엄중한 회초리로 내려치는 것만이 새해 우리 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

‘새해에 바란다’ - 외교·안보

한국 외교 정책 ‘내우외환’ 고난의 행군

한미동맹 균열 위기 ...중국의 ‘西海工程’ 막아야



이규진
총괄부회장

외교와 안보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고 있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삼각과도에 휩쓸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실용외교’로 포장된 ‘자주노선’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을 이루었던 한·미동맹이 균열의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북한은 북·중·러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구애의 추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운 김정은은 핵무력 완성에 이어 최근에는 보란 듯이 재래식 전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파고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이른바 양안문제에 불리는 ‘대만 이슈’는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정책 추진으로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 사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난해 10월 일본 수상이 된 다카이치가 대만의 위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을 터뜨려 중국의 콧수염을 제대로 건드렸다. 금방이라도 군사충돌이 벌어질 것 같은 급박한 분위기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성되고 있다.

이같은 엄중한 국제적 상황이 시시각각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 사이에 대북·대외정책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터져 위태위태하기만 하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요구하면서 불참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외교와 안보전략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틀어 중국과 북한에 유연하게 접근해 새로운 외교와 안보전략을 세울 것이냐 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사이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결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운영되었던 ‘한미워킹그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가 깊은 문제다. 길고로는 ‘현실(동맹파)’과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를 얹혀 균형을 꺾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어이 본색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듯하다”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자주파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신 고립주의로 나아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초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을 보면 ▲미국의 글로벌 역할 축소 ▲동맹에 대한 안보부담 전가를 확실히 못박았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에 원자력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허용하는 것도 미국의 중국억제 전략의 필요에 의한 것임이 판명되었다. 취임 이후 “동맹으로부터 미국이 갈취 당해 왔다”고 막말을 해낸 트럼프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오고야 만 것이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는 현대판 신(新)면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주파’ 통일 정동영 vs ‘동맹파’ 외교 위성락

상(자주파) 추구의 차이로 비쳐지지 만 속은 이념과 철학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결점을 명쾌하게 찾기가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면 위로 떠 오르기도 하고 잠수하기도 하는 이유다.

외교·안보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색칠되기 시작한 것은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 내뱉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햇볕정책을 펼치고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들이긴 했지만 반미(反美)로 까진 가진 않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으로 무장한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현재 국가정보원장) 등 자주파들이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를 장악하면서 외교부·통일부 등에서 민족이 우선이냐? 동맹이 우선이냐?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하면서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관에 동맹파로 분류되는 정통 외교관 출신을 앉히고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엔 자주파 인

표명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미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사뭇 결이 다른 보고를 했다. 문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으로 바늘구멍 하나 들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은 앞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혹시 북한의 태도 변화로 남북정상회담이나 트럼프 - 김정은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된다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양측 대결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미 협력도 혼조가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큰 파고는 대북문제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제2기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 변화다. 트럼프가 일으킨 ‘관세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광분하고 있다. 단순히 무역이나 경제적 이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944년 7월 발족된 브레튼우즈 세계경제 시스템을 허물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도모하

따라 우리에게 글로벌 안보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리셋(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등 동맹의 현대화)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서해한·중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2014년부터 관측용 부표를 설치하기 시작한 중국은 2018년 민간양식시설이라는 구실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리고는 해군훈련과 해경순찰을 강화하고 한국 해양경찰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섰다. ‘서해공정(西海工程)’의 교두보를 만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동경 124도를 ‘작전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한국 해군함정의 진입과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상태가 고착화되면 서해의 70%가 사실상 중국의 관할수역이 된다. 사실상의 영해(領海) 확장이다.

이처럼 한국은 새해에도 외교·안보 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동맹파니 자주파니 집안싸움에 바람 잘 날 없으니 국가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

‘새해에 바란다’ - 경제분야

경제성장률↑ 주가↑ 환율↓ ‘푸른신호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반도체·디스플레이 호황 예상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올해 우리 경제는 비교적 안정될 전망이다. 성장률 1.8~2.3% 상승, 환율 안정, 주가(코스피) 5000포인트 등을 달성할 것으로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전망은 전망일 뿐이다.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경제 현상은 녹록지 않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물가 불안도 여전하다. 성장세 또한 신통치 않다.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를 전망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지난해의 추경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 효과 등이 맞물리며 성장률이 1.8% 상승하는 등 점진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 평가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 경제가 2.3%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무역수지 개선이 성장률 상승의 핵심이란 판단이다. 또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640억 달러로, 국민총생산(GDP)의 8.3%에 달할 것으로 노무라증권은 내다봤다. 환율은 1380원까지 하락하고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으로 이 증권사는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올해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경쟁과 AI 발 전자기기 사양의 상향 평준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중국 발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 분석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 모습.

환율 상승이 경제성장 발목 잡아... 통화 가치 하락률 글로벌 1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원화는 다른 나라 화폐보다도 달러화에 대해 유달리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럽게도 통화가치 하락률은 글로벌 1위다. 환율은 지난해 10월 추석 이후 본격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11월부터는 1450원

돈, 즉 달러가 더 가치 있게 평가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환율 안정태스크포스(TF)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투자 현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환전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 수단도 검토가 아닌 적극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 역시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40%, 상위 100대 기업이 67.6%를 차지했을 정도다.

공공의 적이 된 증시 ‘시장경보제’... 문제점 많아 5000P 달성에 걸림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불청객’이 나타났다. 주식시장에 정책 실패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이른바 ‘시장경보제’가 그 주인공이다. 시장경보제는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경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증시가 호황일 때 우량주가 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오히려 주의나 경고가 들

환율 안정 TF 적극 활용...장기침체 불안 해소

대 위에서 고공 행진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원·달러 환율은 계속 달러당 147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단순한 경제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명시적 정책 압박과 구조적인 달러 부족 현상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리다간 1500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돈다. 환율 상승은 물가와 분배 측면에서 큰 부담을 준다. 한국은행은 지금과 같은 환율 수준이 이어질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보다 0.2%p 오른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율 급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기업·가계 등 경제 주체의 해외 투자 폭증이다. 지난해 해외투자 규모는 29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신한은행 분석에 따르면 1조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마다 환율은 13~14원 상승한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도 환율 상승을 압박한다. 현재 양국 간 금리 차는 미국이 1.25p 높다. 금리는 돈의 가치이므로 미국

지난해 수출 실적 사상 최대...특정 섹터와 기업만 ‘부각’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누적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9% 늘어난 6402억 달러에 달했다. 12월에 598억 달러만 추가되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게 된다. 문제는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AI·서버·데이터센터 등 투자 확대에 힘입은 슈퍼사이클(초호황)을 맞아 11월까지 누적 수출이 1526억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비(非)반도체 수출은 같은 기간 4876억 달러로 1.5% 감소했다. 15대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헬스·컴퓨터를 제외한 10개 품목이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빼면 수출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가 미국 고율 관세와 경기 둔화로 부진한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전통 주력산업의 역성장을 가리며 ‘착시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별로 편차가 큰 수출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어 온 종목에 투기성 자금이 몰리기도 한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에 대해 지난해 ‘투기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정 사흘 만에 다시 ‘투자경고’ 종목으로 격상했다. 이 여파로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락을 거듭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시장경보제 등급이 올라갈수록 해당 종목에 대한 거래가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시장경보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목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기업의 체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보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경제는 심리의 산물이다. 국민과 투자자의 기다림과 불안이 장기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기다림의 국가’가 되면 혁신이 멈추고 경제의 회복력 또한 떨어진다. 향후 우리 경제는 노동·신뢰·창의력이라는 실제적 기반 위로 돌아가야 한다.

‘새해에 바란다’ - 대북정책

막힌 남북대화 복원 서두르면 망친다

북한 대남전략 ‘요지부동’...일방적 유화정책 역효과



염동재
전 국정원 1차장·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보고 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관계 완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보따리’를 마련하겠다고면서 ‘한반도 평화특사’ 신설,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원산·갈마지역 관광, 북한 광물·희토류와 민생·보건·의료 물자를 교환하는 ‘신평화교역시스템’ 구상 등을 보고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온 대북 유화조치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및 시설 철거, 민간단체의 대북빠라 살포 중단 요청,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일부 한·미연합훈련 축소, 북한 표류어부 송환 등 남북대화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삭제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북 유화정책은 일찍부터 예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라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종전선언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사드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고, 대선공약에서도 북한이 파기한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재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에도 ①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



지난 2023년 북한군이 GP를 철거했던 장소에 경계호를 조성하고 고사총(무반동총)을 배치한 모습. (국방부=뉴스1)

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③분단고통 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④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⑤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구 등이 포함돼 있다. 8·15 경축사에서는 북한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교류, 관계정상화 및 단계적 비핵화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는 냉담하기만 하다. 김여정은 7월 28일 담화에서 “한국은 절대로 화해·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서울에서 어떤 정책, 어떤 제안이 나오던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했다. 8월 14일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하의 김여정 담화에서는 “한국은 우리가 국경선 확성기 등을 철거했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고, 9월 13일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담화에서는 “미·일·한의 공화국 주변에서의 힘자랑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방송 중단 다음 날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

한 것 외에 우리의 제안에 냉담한 것은 ①‘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추진 명분이 약해진 데다 ②빠른 시일 내에 북한주민의 머리 속에서 ‘동족 의식’을 지울 필요가 있고 ③중·러의 지원으로 7년 전에 비해 유엔제재 해제와 외부 경제지원이 절박하지 않은 데다 유엔제재로 한국의 대규모 경제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④한국을 배제한 대미접촉이 가능하고 ⑤이재명 정부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경색 및 위기국면 지속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이 3차에 걸친 김여정 담화문을 통해 반응을 표시한 것은 ①이재명 정부의 더 중요한 ‘선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놓을 필요가 있고 ②한국의 대미종속 탈피 및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문제를 협상의제로 이슈화 하고 ③차후 남북 간의 군사충돌 발생 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활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과거부터 주장해 온 ①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②한·미군사연습 축소·중단 ③국가보안법 폐지 ④평화협정 체결 및 종전선언 ⑤전작권 전환 ⑥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⑦북한 영화·시설·간행물 개방 등을 실현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개선된 재래식 전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습득한 드론기술 등이 실현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더러운 평화’ 주장과 대북 유화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핵 위협의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국지적 도발이나 남한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 등을 획책할 가능성도 크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철두철미 제1적대국이고 불변의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공화국의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 및 교류·협력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장대로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과 소모적 적대행위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보체제 약화를 대가로 대화가 추진돼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다음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의미 있는 교류·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정은에게는 발전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최대의 안보위협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화에 앞서 우리의 안보태세 강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 3대 방위체제 완성(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대량 응징보복체제), 반국가세력 척결 및 국가보안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남북 대화는 성급하지 않고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돼야 한다. 성급한 대화 추진은 아무 결실 없이 김정은 체제 강화와 우리 안보체제 약화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전선언, 전작권 전환, 유엔제재 완화 등 앞에서 지적한 7가지가 대화유도를 위한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새해에 바란다’ - 사회분야

‘부정선거 논란’ 사전투표 폐지해야

‘헌법의 비밀선거 원칙 위반’ 6·3지방선거부터 시행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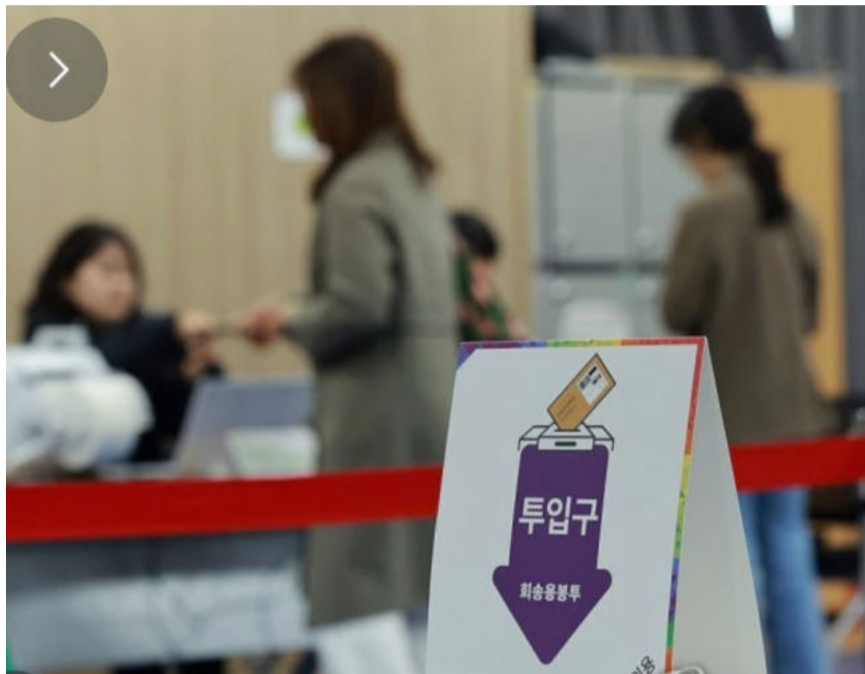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사전투표제는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제고, 투표율 향상,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 유권자는 물론 선거전문가·통계학자·시민단체 사이에 헌법상의 자유선거·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결과의 통계적 정합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11면>

특히 2020년 4·15총선, 2024년 4·10 총선, 2025년 6·3대선을 거치며 사전투표 결과가 본투표 결과와 현저히 괴리되는 현상이 반복되자, 이를 우연이나 좌·우파 정치성향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확산됐다. 헌법 제41조와 제67조는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만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가능성 ▲장기간 투표지 보관 과정에서의 관리·통제 문제 ▲본투표와 분리된 개표로 인한 검증의 어려움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비영리 민간기구인 국제공정선거연합(National Election Integrity Association, 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후 실시된 한국의 6·3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투표라고 지적했다.

2025년 5월 26일 입국, 대한민국 중앙선거관위의 반대 속에서 10일간의 선거감시활동을 벌인 IEMT는 6월 5일 감시단원 모스탄 美 리버티대학교 로스쿨 학장(전 미국 국제형사재판소 대사), 존 밀스 국제선거공정성연맹 이사, 그랜트 뉴엄 미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블레리 테이어 아이슬란드대 정치학 교수 등 4인의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6·3



대선에서 나타난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득표율의 ‘극단적인 괴리’(Extreme Disparity)”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 투표율은 42.0%로서 사전 투표율에 비해 4.6% 높았다.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투표에서 37.96%를 득표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얻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37.28%p에 이르는 것은 수학의 통계학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다른 득표율 제3, 제4위 군소후보의 경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득표율을 보면 제1, 제2위 후보자 득표율에서 보는 ‘이상 징후(불규칙성/irregularity)’가 보이지 않는다. 제3후보(이준석)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했고, 제4후보(권영국)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기록

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군소후보와는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IEMT는 이러한 감시결과를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미국 등 세계 언론매체와 공유하고 유엔과 미국정부에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의 좌파매체를 포함한 주류 언론은 이런 사실에 눈을 감았다.

통계학 전문가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밝혀온 공병호 박사와 민경욱 전 의원, 박주현 변호사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및 각종 보궐선거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거의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해 부풀려 증가시키는 수법으로 선거를 자행, 국민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의 4·10 총선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자 수 316만 여 표를 조작해 증가시키는 수법을 적용함으로써 전국 254개 선거구 별로 평균 1만 2400여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 수법으로 인하여 전국 3405개 읍·면·동 투표소 중 57개 읍·면·동을 제외한 3348개 읍·

면·동에서 전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하는, 즉 98% 이기는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학적으로 조물주의 조작으로도 불가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254개 지역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은 9개 선거구를 제외한 245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 결과는, 중앙선거위가 조작한 투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모조리 더해 준 결과, 단 한 지역도 빠짐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00% 승리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神도 행위 불가능한) ‘부정선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전국 3405개 읍·면·동 투표소 가운데 999개 읍·면·동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인 수가 더 많은 명백한 위조 투표지 투입 증거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자 수 더해주기 수법으로 인하여 4·10 총선거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강원·제주 등 경합지역에서, 최소 53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유력 당선자임에도 낙선자로 뒤바뀌어지는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 53명은 일부 언론에 실명이 보도되기도 했다.

4·10총선후 2024년 5월 7~8일 양일간 언론비평 시민단체 ‘바른언론 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46%, 국민의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보수층 응답자의 60% 이상이 사전투표 등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83%는 선거위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사전투표제가 문제가 심각하고 보완도 어렵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게 정답일 것이다. 유권자에게 투표 접근성 제고와 함께 더 많은 투표 참여 기회를 부여하려면 당일투표일을 이틀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해에 바란다’ - 체육분야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달립시다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하형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변화와 도약, 도전을 상징하는 적토마(赤兔馬)의 기운을 받아,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원하시는 목표에 힘껏 도전하고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줄 ‘K-스포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는 2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대회를 시작으로 3월 월드컵베이스볼, 6~7월 북중미 FIFA월드컵, 9월 아이치 나고야 하계아시안 게임, 11월 다카르 하계청소년 올림픽대회까지 다섯 개의 메이저 스포츠 이벤트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우리 선수들이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며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의 힘을 세계



가대표-후보선수-꿈나무선수로 이어지는 새로운 육성 체계를 도입하여 엘리트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뿌리인 유망주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든든한 스포츠 동반자로서 전 국민이 스포츠와 함께 건강과

2월 동계올림픽·6월 월드컵 축구 체육회, 올해 5개대회 성공 지원

에 널리 알리고, 국민 여러분께 자긍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스포츠 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된 체육 환경을 반영한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폭력 예방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미래국가대표 및 학생선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대표-예비국

활력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아래, ‘공정, 혁신, 신뢰, 상생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내실을 이루겠습니다. K-스포츠가 한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때 더 멀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론인 및 국민 여러분이 대한체육회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6년 병오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이 남긴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민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올림픽 레거시를 계승한 기관으로서 그 유·무형의 가치를 오늘의 현실과 미래 세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체육공단은 2026년 경영 방침을 ‘존중, 조화, 정정당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관 운영 전반에 일관되게 반영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사회, 그리고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가기 위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한 연대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포츠 재정의 안정적 지원과 공정한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협력기관과 ‘공존 공생’하며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과 체육 현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단기적 성과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건강한 스포

1조 6천억 들여 국민건강 증진 체육공단, 스포츠 공공가치 실현

이러한 경영 방침 아래 2026년 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총 1조6,557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스포츠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폭넓게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단은 이 소중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원칙아래 책임 있는 기금운용과 경영을 실천하며, 스포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긴밀

츠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언행이 일치하는 정정당당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원칙을 세우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운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건강한 변화는 곧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재해석하며 스포츠를 통해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며 정정당당하게 실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정자들, ‘법의 삼지창’으로 국민 찌른다

‘의회독재’ 민주당 무소불위 점입가경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지난해 12월 중순, 이재명대통령이 각부처 업무보고시에 자신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 아니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 대해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라고 극단적 언사로 비난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은 고위공직자를 불신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해서, 또는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고 공무원사회의 기강이 바로잡힐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

일반론으로서는 어떤 공직자가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면 ‘도둑놈심보’라는 비난을 들어도 가당하다. 그러나 이학재사장은 달리의 밀반출을 적발하는 것은 공항공사의 업무가 아니고 세관의 업무인데 세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항공사도 적발에 협조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대통령의 이 비난은 자기가 그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랏일을 면밀히 챙기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려다가 공연히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뉘달을 하다가 무안하게 되어버린 상황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의 성격이 크지 않은가 싶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고위직 공무원에게 ‘도둑놈심보’ 같은 극단적인 비난을 퍼붓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게다가, 이재명대통령은 자신의 ‘약점’이 크게 노출된 사람이라서 남을 비판·비난할 때 조심스럽지 않으면 안된다.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 국민은 그것이 이대통령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이대통령을 더욱 상처낼 수

도 있다. 그리고 이대통령이 이 설전의 ‘끝’을 보려고 한다면 아주 추한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고(故)노무현대통령은 자기 형이 대통령의 형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했다고 비난을 많이 받아 ‘잘 배우신 분들이 배우지 못한 우리 형님을 꼬드겨서 비리를 저지르게 했으니 참으로 원망스럽다’라는 취지로 응수했다가 그 형님에게 대우조선 사장직 연임 ‘로비’를 부탁했던 남모사장이 자살을 한 일이 있었다. 이번 경우 역시 그에 못지않은 매우 경솔한 언사였다.

이대통령은 그 바로 다음날은 역사학계에서 대표적인 위서로 꼽히는 ‘환단고기’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항마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동북아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를 언급했다가 또다시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이튿날 몇몇 마스크에서 ‘환단고기’의 사료로서의 무가치성을 보도했으니 이대통령의 낭패감, 굴욕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이대통령에 대한 불안, 의혹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다. 그리고 취임 6개월 동안 이대통령은 그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만한 변모를 보여주지 않았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절대다수당이 되고보니 정부·여당은 천하를 제패한 기쁨에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다.

필자는 작금의 더불어민주당 만큼

무지막지한 권력집단이 있을까 싶지 않다. 국회에서 흘러나오는 소식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가 파멸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알리는 뉴스이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화면에 비치는 여당의원 면상의 99%가 예의나 염치나 양식(良識)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살기등등한, 탐욕과 몰염치와 몰상식의 초상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예외없이 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영속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작업이다. 이점은 모든 국민이 매일 느끼고 있기에 부언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극도의 일당독재를 강행하는 바람에 비교적 견제했던 양당제가 무너져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확보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던 법사위원장을 제 2당에 배당하는 관행도 깎아뭇개고 제2당에서 간사를 지명하는 것도 막았다. 그리하여 법사위원회를 인민재판소 겸 대한민국 해체작업본부로 만들었다.

그 고유업무이자 권한이 죄를 밝혀내는 것인 검찰을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의 죄를 수사해서 밝혔다고 해서 해체를 한다니 국민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경찰의 수사능력과 속도만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3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인 사법부를, ‘법관이 아니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파괴해서 실질적으로 수십명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입김이 가장 막강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하부기관, 종속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 여당 당대표는 “대법원장 따위가 뭐라고” 하는 따위의 말을 공식 석상에서 거리낌 없이 하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국무총리와 비밀리에 만나서 이재명 재판의 파기환송을 밀약했다는 혐의를 씌우려하지 않나, 대법원장을 국회법사위장(場)에 묶어놓다 시피하고 별의 별 모욕을 다 주었다. 급기야 ‘내란전담법원’을 만들겠다고 재판을 진행과 결과를 국회의 지휘통솔하에 두겠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재정면에서, 이 정부는 취임하는 날부터 헤폰 씹씹이로 나라의 빚을 엄청나게 불려놓고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아끼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멈추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당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운 좋게 ‘내란’이라는 마법의 검을 주워서 천하무적이 되었고 이 검을 무소불위로 마구 휘둘러대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이라는 칼날에 베인 국민의 숫자는 아직은 정치권과 시위대 등이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하고 이 내란몰이가 언제, 어디서 끝날지 기약이 없으니 나라는 오랫동안 어수선하고 애먼 피해자는 부지기수가 될 듯하다. 이제 모든 4급이상의 공직자는 내란과 연관이 있는지 심사를 받는다니 “1984”에서와 같은 상호고발, 밀고 등으로 공직사회가 한참 어지러운 모양이다. 이로써 낭비되는 공적, 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이며 애꿎은 피해자는 또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일병구하기’에 진력하는 모양이다. 그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북한과 친하기를 원하고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대통령은 문제인 못지않게 북한을 극진히 생각하는 듯 하다.

이런 이재명정권이 1년만 집권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헌법은 만신창이가 되고 사회질서도 붕괴되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치안도 무너져서 젊은 세대는 일자리와 자기발전, 안전을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고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체제불만을 누를 길 없는 탈북자들이 몰려와서 채우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인들 사이에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나 존중은 털끝만큼도 없고 팽범한 국민은 정치권이 던져주는 먹이(오늘은 현지, 내일은 장경태, 모래는 조진웅)를 한입씩 받아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판국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부역하는 수밖에 없고 그들의 행태를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이 풍토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앞날은 10년을 기약하기 어려워 보인다. ☹

특파원 수첩 런던⑨

전두환 정권 ‘도재승 몸값’ 절반 떼먹었다

1987년 직선제 大選 앞두고 정부 석방교섭 서둘러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조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귀국한 도재승 서기관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맞이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한뉴스 갈무리)

1년 9개월, 무려 638일 동안 납치되어 생사의 고비를 헤매던 도재승 서기관은 1987년 10월말 석방되어 점차 안정을 되찾고 마침내 외교 업무에도 복귀했다. 그러나 그의 석방이후 후 일담은 더욱 무성했다. 납치한 단체의 정체, 석방과정, 억류 기간 중 생활, 몸값 등등. 석방 뒤 온갖 의문에 대한 취재와 추측은 난무했다.

도재승을 납치한 단체와 석방 경위에 대한 의문은 석방 뒤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테러리스트들과는 협상하지 않으며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을 밝히거나 석방대가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오는 일이 없다. 이것은 차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정황으로 보아 범인들은 레바논 내 시아파 회교단체가 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아파 협상 중개인이 같은 시아파내 아말파 민병대에 신병 인수를 지시하고 인질금을 주차장 트렁크에 넣어놓자 그 금액을 확인하고 도재승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의 석방 10여년 뒤 월간지 <신동아>는 장문의 흥미로운 ‘발굴 비화’를 소개했다. <신동아>는 1998년 1월과 그로부터 다시 5년 뒤인 2013년 11월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익명의 제보와 실제로 구출작전을 주도한 인물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석방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래서 흥미는 배가 되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석방을 주도한 인물은 미 정보부(CIA) 출신 리처드 롤리스 당시 미 국방장관 고문. 그는 1970~80년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원자력, 방위산업을 담당했던 인물. 도재승의 석방 교섭은 공직에서 물러나 경영 컨설팅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그를 찾아온 정 모 씨의 부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정 모 씨는 삼성 중공업 고문을 지낸 막역한 친구. 롤

리스는 외무부 당국자들과 ‘몸값 500만 달러, 3개월 내 석방’에 합의, 제네바에서 미술품·보석 거래 사업을 하는 친구인 빅터 샤이토 (아르메니아인)와 그가 아는 현지 브로커 등 인맥을 동원하여 도재승의 생존사실을 확인하고 천신만고 끝에 석방을 성공시켰다. 그들은 베이루트 내 아랍 공동체와 깊은 유대를 갖고 있었고 얼마 전 납치되었던 독일 지멘스 직원을 500만 달러를 주고 석방시킨 인물이다. 그들이 일본인 외교관을 납치하려다 실수로 도를 납치했다는 사실도 400여개 갱단 리스트를 뒤조사하고

령 선거 때문이었다는 것. 도의 석방은 두 달 뒤 실시된, 유신이후 첫 직선제 대선에서 여권에 큰 호재로 작용했다. 롤리스의 회고는 실명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잇단 폭로 보도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도재승이 피랍되어 있던 21개월 동안 어떤 생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을까 하는 의문 또한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 동안의 생활에 대해 그가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기 때문이다. 납치의 아픔은 하루 빨

아 고고학 유물 다양. 그린라인은 ‘지역의 공간’

오랜 내전에 시달리던 베이루트도 점차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16년 동안의 내전, 경제위기, 정치적 불안, 코로나 19, 베이루트 항구 폭발 등 온갖 악재를 무릅쓰고 2025년부터 관광객 회복 조짐이 뚜렷하고 공항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다. 주변지역의 불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 등으로 안정감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중동의 파리’, ‘아랍의 심장’이란 옛 명성을 되찾아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가 당시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밀애를 즐기던 세인트 조지 tm 호텔은 내전으로 파괴되었던 건물을 복구, 25년부터 본관 건물 앞에 ‘더뷰’(The View)를 새로 지어 관광객 예약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홀로데이인은 소유권 분쟁에, 일부는 군사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인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 스나이퍼들이 겨루고 싸움을 벌이던 그린라인은 역사적 용어일 뿐 관광책자에는 ‘내전의 상처가 담긴 기억의 공간’으로 기술

도재승 서기관 석방 10년 뒤 다시 중동 근무 “눈가린채 이동... ‘동물이 된 기분’으로 버텼다”

아말 브로커로부터 얻은 정보로 뒤늦게 알게 되었다. 도재승서기관 석방 10년 뒤 다시 중동으로 눈 가리고 이동. ‘동물이 된 기분’으로 지냈다

그러나 도의 생존이 확인되고 일이 풀려 간다는 생각이 들자 전두환 정권은 약속한 몸값 절반의 돈을 내놓지 않아 결국 중간에서 아말파의 약속을 깨뜨릴 수 없어 ‘선금’을 전달한 샤이토만 돈을 떼었다는 것이다. 협상 주도권을 빼앗긴 안기부가 불만을 품고 몸값 전달을 방해하는 ‘기관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청와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결국 롤리스는 외무부로부터 ‘두 번째 250만 달러(당시 환율로 20억원)는 어렵게 됐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초기에는 사건을 모른 척 하던 정부가 갑자기 교섭을 서두른 것도 다가올 대통

리 잊고 싶고 피랍 당시의 고통은 회상하기도 싫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다만 석방 직후의 인터뷰와 간접 취재를 통해 그 일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드러났을 뿐이다. 그는 피랍기간 중 ‘동물이 된 심정’으로 ‘낮과 밤의 구별이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견뎌냈으며 괴한들은 2~3개월마다 거처를 옮겨 한 곳에 적응할 만하면 눈을 가리고 몇 시간을 자동차로 달린 뒤 내려 놓곤 했다고 술회했다. 석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외교 업무에 복귀, 여기저기를 거쳐 납치 10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지다 총영사로 중동에 파견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정년퇴임 후 검도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여생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의 파리’ 베이루트 옛 명성 되찾

되어 있다. 그 일대에는 주요 도로가 복구되어 고층건물, 쇼핑센터, 부티크, 금융기관, 오페라하우스들이 들어섰다. 일상적인 물류와 통행이 자유로워진 것.

리비아에는 전쟁의 흔적과 현대적 도시미학이 공존하여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해안 도시답게 지중해 산책길도 매력적이고 페니키아, 로마, 오스만시대를 아우르는 고고학 유물도 다양하다. 베이루트 중심부에 있는 순교자 광장, 네즈메 광장시계탑, 고대 페니키아 항구나 로마 원형경기장 등에 관광객이 몰리고 전통 수크(시장)도 활기를 띤다. 순교자 광장은 오스만 제국 시절 반체제인사들이 처형당한 곳. 서쪽 해안 길게 뻗은 모래밭 끝 바위절벽은 그 중에서도 핫플. 현지인들이 멋진 풍광, 석양과 함께 지중해식 요리를 즐기고 있다.☞

사전투표 이대로는 안된다

자유헌정 포럼 개최 '사전투표제 실태진단' 토론회 요약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선거가 병들면 민주주의는 시 들고 말 것’이라는 담론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건강한 선거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벌어지고, 급기야 부정선거를 외치면 음모론으로 되받아 치는 지경에 까지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 제도다. 무엇이 문제인가? 1월6일 오후 국회에서 ‘자유헌정포럼’(대표 송광호)에서 개최하는 「사전투표제, 실태진단 및 대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핵심 내용을 발췌·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註)

〈주제발표〉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 2013년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사전투표제는 최근 이용률이 전체투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시간, 공간에서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한다는 사전투표가 본투표에 비해 ‘선거부정의 위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 부정이 저질러질 때 이를 방지하고 사후에 밝혀낼 제도적 장치가 본투표에 비해 현저히 허술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선거부정의 관점에서 사전투표는 제도적 흠결투성으로 설계되어 있다. 본투표와 비교해 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본투표에서는 선거 결과를 검증할 ‘오프라인’ 실물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 보관하고 있다. ■개개 투표인이 직접 날인(혹은 서명)한 ‘선거인명부’ : 누가 투표했는지와 투표자(지) 전체숫자 파악.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개인도장) 날인 : 투표지 진위 여부 파악. ■일련번호지 : 투표지 전체숫자 및 투표지 진위여부 파악.

이들 증거자료를 수집, 보관하게 한 법적 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게 아니다. 만반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선거부정이 벌어졌을 때 재판에서 부정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즉 선거부정 자체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달리 선거부정을 밝혀 줄 오프라인 실물증거물을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하나 하나 대비해 보자.

(1)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를 두는 이유가 있다. 투표자가 날인 혹은 서명하게 하는 제도는 누가 투표했는지와 투표자(지) 전체숫자를 특정하는 오프라인 실물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온라인’으로 설계하고 있다. 즉 전산정보 자체를 선거인명부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서명 혹은 날인은 지문인식 및 신분증명서 전자이미지 보관으로 대체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이 해킹 당하기 쉽고 해킹으로 조작됐을 때 그 부정을 입증할 방법이 난감하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에서의 투표용지는 프린트해서 인쇄된 ‘인쇄용지’일 뿐이어서 누군가가 가짜 인쇄 투표용지를 조작하여 투표인 전체숫자에 맞춰서 투표함에 투입한다면 통합선거인명부의 해킹 조작을 입증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거‘전용’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가전용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에 접속된 선거전산시스템은 해킹에 언제든지 뚫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다.

(2)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은 단순한 인쇄용지를 진짜 투표용지로 변경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절차다. 계약서 용지에 당사자들이 날인해야만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가 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투표관리인 사인이 있는지 그 사인이 진짜인지는 투표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실물 자료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날인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사인날인’을 대신해서 ‘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 전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쇄날인’을 하면 된다는게 중앙선관위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서로 분리되어 있던 일련

본투표에 비해 선거부정에 너무 쉽게 노출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하던 지 아예 폐지해야

‘인쇄’ 여부로 가리자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에서는 같은 종류의 프린터, 같은 종류의 종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인쇄해 만들 수 있다.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나중에라도 프린터로 인쇄날인한 투표용지를 출력해 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너무나 쉽게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고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3) 일련번호지 수집·보관

일련번호지는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떼어서 따로 수집, 보관하는 투표용지의 일부분이다. 따로 떼어서 따로 보관하는 제도는 나중에 돌을 맞춰봄으로써 제 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련번호지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실물자료가 되고 전체 숫자를 확인하는 실물증거가 된다.

번호지와 투표지를 추후 맞춰봄으로써 투표지의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수단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만일 누군가가 가짜 투표지를 인쇄해 만들어 투표함에 넣었다면 그 투표지가 가짜인지, 얼마나 많은 숫자가 투입되었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전투표 제도의 실상이다.

결론적으로 사전투표는 투표절차에서 ‘실물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과제를 전부 포기하고 있다. 현행 사전투표에서는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투표함에 넣으면 그 투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

이같은 제도적인 흠결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제대로 투표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정리: 이규진 총괄부회장).

민주확장 vs 국힘 수성 '미니총선' 뜨겁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17곳...정치지형 변곡점 예상



김 화
본회 이사·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김동연



양기대



오세훈



이준석



전현희



추미애

6월3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연초부터 열기가 뜨겁다. 선공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도 서울의 시장 탈환을 위한 4선의 오세훈 현 시장을 향한 집중포화로 점화됐다. 서울시장이란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부터 오 시장의 종묘 앞 세운상가 재건축 프로젝트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서울 출신 국회의원들이 별떼처럼 달려들어 비난했다.

6·3지방선거는 17곳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시·도의원과 226곳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 외에 공석인 인천 계양을, 아산,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기 화성갑, 인천 동미추출갑과 현재 재판 중으로 곧 선고가 나올 3곳의 국회의원 보선까지 합치면 미니 총선과 이재명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여기에 한동훈, 조국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송영길까지 출마가 예상되고 있어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선거판이 의외로 커져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22년 6월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승했다. 광역단체장은 17곳 중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으로 국힘이 배 이상 압도했다. 경기도 국힘이 차지할 뻔했다. 국힘의 김은혜와 민주의 김동연 초접전 박빙 구도로 개표는 초반부터 김은혜가 앞서다가 새벽 막판에 김동연에 역전패했다. 아슬아슬 했다. 국힘은 서울 인천 총북 총남 세종 대전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강원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경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5곳에 불과했다. 226곳 기초단체장도 국힘 140곳, 민주 60곳으로 국힘이 두 배 이상 압승했다. 서울 25곳 구청장은 국힘이 강남3구를 비롯해 17곳에서 당선됐고, 민주당은 강북과 노원 등 한강 이북 8곳에 그쳤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광역단체장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은 지방단체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현 오세훈시장이 5선에 도전한다.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



연령별	비율 (%)
19~29세	54.3
30대	75.7
40대	71.0
50대	72.7
70세 이상	80.0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의 한예. 대부분 '반드시 투표'가 대세.

서울 '5선 겨냥' 오세훈에 민주당 중진들 출사표

경기 현지사 김동연에 국민의힘 원외인사 대항마

33·34·38·39 네 번 당선된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강력 예상되고 있다.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과 구청장 출신의 조은희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거론되고 있다. 오 시장이 5선되면 본인의 대통령 꿈이 무르익을 것이고, 국힘도 대역 투쟁에 한 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출설이 한 때 제기됐으나 당 대표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전현희 등 서울출신 다선의원들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연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우고 있는데 통일교계이트 연루설과 폭력전과가 드러나 상처받고 있다. 민주당의 깊은 고민은 현재 거

론되고 있는 후보군 중 어느 누구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현 시장에게 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대권을 꿈꾸며 출마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진급 의원들이 출마를 밝히고 있어 당

내 경선을 지켜봐야 한다. 김병주 의원은 출마의사를 밝혔고 추미애 이연주 의원 출마설도 나돈다. 친명계 7인회 멤버인 김영진, 수원시장 3선 출신의 엄태영 의원, 비명계인 박광은, 양기대 전 의원도 출마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은 기피하고 오히려 원외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유승민 원유철 전 의원이 출마를 계기로 정계 재입성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는 판이 커질 것이다. 인천은 역대 민선시장들이 당선 이전 모두 국회의원 경력이 있고, 전원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 특이하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현 시장과 민

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두 사람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힘은 3선 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

사 시장과 5선의 윤상현, 재선의 배준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박남춘 전 시장과 정일영 의원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접전이 예상됐는데 전 장관이 통일교로 부터 현금 2천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결과가 변수가 될 것이다. 조국 출마설도 나돌고 있다. 세 사람이 출마하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국힘에선 조정태 김도읍 의원, 민주는 박재호 전의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경남은 박완수 국힘 현 시장과 김경수 민주당 전지사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3천만명 정보유출 쿠팡 ‘현대판 계륵’?

정부 소비자 보호정책 시급...기업 책임 강화해야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 전 서울신문 부국장

최근 일어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2025년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단골로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신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카드와 계좌번호가 고스란히 쿠팡에 수록되어 있어 2차 피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18일에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해 관련 기관에 보고했고 이를 후에 4천5백 건의 인적 사항이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그 후 자체 조사 과정을 거친 29일에는 3,370만 건이 유출됐다고 추가로 정정했다. 이 숫자는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 5,160만 명의 65%를 넘는 데다,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 4명 중 3명에 속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쿠팡은 초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24일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이 시작된 그것으로 결론을 냈고 한국에서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다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퇴직 직원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키를 악용해서 벌인 일로 추정했다.

즉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퇴직자가 인증된 시스템 접근키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마음껏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더 기막힌 일은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금고 속이 탈탈 털리는데도 4~5개월 동안 전혀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이다.

국내의 기업 대부분은 퇴직자의 사원증은 물론 사옥 출입증까지도 즉시 회수하는 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 야박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겠지만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글로벌 IT 기업이라고 자칭하는 쿠팡이 외국인 퇴직자의 암호키 회수를 간과한 것은 유출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지난 2010년 8월 미국 하버드대학 출신인 김법석 의장이 창업한 쿠팡은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에서 쿠팡 배송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서울=뉴시스)

본사가 있는 미국보다 한국과 대만을 사업지로 선정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는 미국 법인이다. 초창기 때는 공격적 투자를 시도한 탓에 엄청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 시기를 넘기면서 오프라인 점포인 이마

사항이 대거 유출된 경위와 앞으로의 수습 대책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쿠팡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세종시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이 위반을 받

새벽 배송이 눈앞에 떠올라 다시 마음을 바꿨다. 편하고 저렴하다는 독특한 상술을 외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실토하는 구매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피해자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30여 곳에 수만 명이 가입했다는 소문이 들려오

소비자들 정보위험 알고도 쿠팡 배송 이용

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매출을 뛰어넘어 연 매출이 40조 원을 넘어서는 거대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특히 회사의 사시(社是)적인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표방해 별도의 배송비를 안 받고 무료로 배달하는 회원제 ‘로켓배송’을 시작한 것이 쿠팡의 성장 원동력으로 꼽힌다. 여기에도 오전 7시 이전에 전날 주문한 상품을 문 앞에 도착시키는 ‘새벽 배송’ 전략까지 추가하면서 식재료 구매 시간에 고민하는 직장인과 주부 회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순간적인 자만과 방심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됐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중국인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자 당황한 정부 관련 부서는 갖가지 방향으로 쿠팡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3,5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없는 쿠팡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를 열어 이용자들의 인적

을 먹듯이 한다. 누구나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질책한 후 “요즘 그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관심은 잠자고 있던 상설 특검을 깨어나게 했다. 지난 2021년 세월호 사건 특검 이후 두 번째로 쿠팡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안권섭 상설 특검이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쿠팡뿐만 아니라 SK,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카드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직은 쿠팡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이 무료 익일배송, 새벽 배송이라는 구매 방식에 매료된 상태라서 편리함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인간적인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쿠팡 구매자는 “이번 유출 문자를 보고 통장이 해킹당하거나 끔찍한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 겁이 나서 회원 탈퇴를 결심했다가 생필품

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10개 정도의 로펌과 접촉하여 소송 의뢰인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니 쿠팡을 상대로 한 총공세는 새해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의 쿠팡은 국내 소비자에게는 ‘계륵(鷓鴣)’ 같은 존재다. 계속 쓰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버리자니 너무 아쉽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인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방지하려면 우선 정부가 먼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만들어 책임은 외면하고 이익만 거두려는 기업의 방만을 감시해야 한다.

이번 유출 사태의 당사자인 쿠팡은 안권섭 특검에 ‘미국 기업’ 운운하며 당장의 위기를 넘길 생각만 하면 해결이 안된다. 구매자 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사실을 솔직히 사과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도록 더 완벽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어 신뢰를 쌓아야만 ‘낮잠 자다가 몽땅 털린 집’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이다. ☞

李 대통령 ‘환빠논쟁’...역사전쟁 불붙다

교육부 업무보고서 ‘환단고기’ 사관문제 제기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이재명대통령이 10월 18일 ‘여수·순천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합당한 항명> 이라고 폭탄 선언한 두달 뒤 12월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빠논쟁’을 화두로 사관문제를 제기, 역사전쟁에 불을 붙였다. 좌편향 대통령과 뉴라이트 서양 사학자(서울대 명예교수)가 맞장 대결한 12일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거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같다”라며 사관을 강조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료가 정확한 역사 기록의 열쇠”라고 역설, 정면 대립했다.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원장 임기까지 캐물은 이 논쟁에 대해 12월 17일 47개 역사학회는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역사 논의는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모순”이라고 ‘환빠 옹호론’을 지탄하며 “가짜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밝히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동북아역사재단과의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환빠논쟁 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날조한 고조선·고구려·발해·부여 역사 왜곡 문제와 김대중 정부가 독도 근해를 한일공동 관리수역으로 획정한 한일어업협정 등 현안을 논의했어야 했다.

2009년 동북공정 마무리 후 중국공산당은 고조선을 신화로, 발해·부여·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속국으로 규정, 고구려 영역이 충북 중원까지였다며 중국 고대지도에 충북을 중국 강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반도 내 고대 중국 강역 수정은 물론 독도를 둘러싼 바다를 한·일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합의한 김대중정부 협상 오류를 밝히고 한국 수역으로 복원해야 할 것이다.

환단고기는 단군 조선 이전에 한국 3301년, 배달국 1565년의 역사가 실존했던 것으로 서술, 한국사의 시원을 1만년 전으로 올렸으며 영토는 아시아 대륙을 포괄하는 ‘남북 5만리, 동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2025.12.12(연합뉴스=제공)

서 2만리’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12개 한국 중 하나인 ‘수밀이’는 세계 최고 문명의 하나인 ‘수메르’로 고대문명이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암시하고 있다. 중국 신화 치우(蚩尤)를 환단고기는 ‘배달국 14대 임금이었다’고 서술, 치

감효원 광복군 등 4인의 조사단이 광개토태왕릉비 제 1차 현장 조사에서 이진희 교수 탁본에서 미확인된 256자 중 138자를 판독, 모두 1705자를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제보해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4·3사건 발언 등 국가 정통성 확립 시급

우가 월드컵 한국 응원단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 잃어버린 한국 상고사를 1911년 계연수 단학회장이 복원한 것이라고 1979년 이유립(李裕烈) 단학회장이 밝혔다. 숙종 원년에 북애자(北崖子)가 서술했다는 규원사화(揆園史話)와 비슷한 성격의 고대사 환단고기와 규원사화는 구한말 유학자들이 구비 전승 자료를 역사적 사실로 꺾어 맞춘 위작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지만 두 책의 ‘역사관’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환단고기의 저자로 추정하는 이유립 단학회(1907~1986)는 평안도 삭주 출신 유학자다. 1972년 11월 경향신문이 이진희(李進熙) 재일사학자의 <광개토태왕릉비의 연구>를 소개하며 비문 1822자 가운데 256자를 읽지 못한다고 보도하자, 1898년 계연수(桂延壽) 이관집(李觀緝)씨와 이덕수

오동진(吳東振)광복군 총영장의 후원으로 광개토태왕릉비를 조사했던 조사단의 광개토태왕릉비문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이유립씨의 보고서와 이진희 씨 저술에 대해 당시 김종무 이병도 교수는 신뢰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천관우 홍이섭 김선기 김상기 교수는 임나일본부 문제를 풀어줄 결정적인 자료의 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이섭 연대교수는 이유립씨의 광개토태왕릉비 보고서와 한국고대사 연구 문제제기를 주목할만 하다고 평가하며 손보기교수를 통해서 고려사 1질을 대전 은행동 이유립씨 적산가옥 전셋집에 보내기도 했다. 1973년 『광개토태왕릉비문 역주』를 대동문화사에서 발간하고 잊혀졌던 이유립씨를 1984년 4월 박정학 대령이 사숙하는 학자로 필자에게 소개해서 재회했으나 이유립씨가 그날 타계했다. 이유립씨는 커발한(居發桓) 잡지를 만들어서 학술·문화부기자와 학자들에

게 돌리기도 하며, 이암 이기 계연수 등 유학자들의 사상과 수집한 한국사 자료를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노력했다.

환단고기 역사논쟁이 한국 고대사 정리에 재조명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환빠논쟁’으로 역사전쟁에 불붙인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부터 제기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4·3 반란, 6·25 전쟁에 관한 돌출 발언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이설로 역사학계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10월 19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의 무장 반란을 “부당한 명령에 맞선” 합당한 항명(抗命)이라고 평가한 것은 역사 왜곡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했다. 2021년 7월 1일 안동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친일 세력들이 미(美)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도 브루스커밍스의 수정주의 가설과 북한 『조선통사』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과 비슷한 역사왜곡이라고 보수인사들은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4일 고 박진경대령에게 수여한 국가유공자증서를 보훈처가 다시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남로당의 4·3 반역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의 후유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6공 대통령들의 대한민국 정통성·정체성을 부정한 발언에 이어 이재명대통령의 국가전복전쟁을 우려하는 역사왜곡 언사도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식인들은 걱정한다.

이재명대통령은 지식인들이 우려하는 좌편향 종북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고발하고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념통합 없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우며 국가 정체성 합의 없이 국가통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재명정부가 좌편향 세력의 국가전복 도전을 극복하길 바란다. ☞

에너지 저장장치

10조원 규모 ESS시장 선점하라

경제 포커스

국내배터리3사, 북미 시장 공략

국내 배터리 업계(K-배터리)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떠오른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 선점에 사력(社力)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글로벌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는 북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ESS사업 확대를 지렛대 삼아 반등의 기회를 꾀하자는 모양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수요 둔화)이 길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는 불황을 반전시킬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유럽과 중국 역시 소비자 보조금 축소와 경제 불확실성 탓에 신규 수요가 정체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까지의 전기차용 배터리 주력 생산에서 탈피, 새롭게 뜨고 있는 ESS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북미 ESS 시장이다. 미국 등 글로벌 주요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이 잠식하고 있는 몫을 상당 부분 가져올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3사 LFP 무기로 북미 ESS 시장 적극 공략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서 대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북미 ESS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속 기술력 확보와 현지 생산 구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가장 큰 적패를 터뜨린 기업은 삼성SDI다. 삼성SDI아메리카(SDIA)는 최근 미국 현지 에너지 관련 기업과 LFP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2조원대로, 삼성SDI 매출의 15%를 차지하는 대형 계약이다. 공급은 2027년부터 약 3년간 계속될 예정이다.

삼성SDI가 ESS용 LFP 배터리로 대형 계약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SDI는 이에 앞서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했다. LG엔솔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지난해부터 LFP 기반 ESS 배터리 양산에 들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직원이 배터리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LG엔솔 제공)

어갔다. 올해 말까지 연산 30GWh(기가와트/時)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온은 올해 하반기 조지아주 소재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잇따른 ESS 수주 계약으로 그동안 약점으로 평가받던 LFP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울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SS 섹터는 수 조원 단위의 장기공급 계약이 가능한 시장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 속 K-배터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감지되고 있다. ESS는 전기차 대비 보조금 영향이 적고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돼 대형 장기계약을 확보하기 용이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 ESS 산업 육성 위해 발 벗고 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이처럼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이 지역 ESS 시장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인 SNE 자료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4년 78GWh에서 2030년에는 153GWh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강화도 북미 ESS 시장 적극 진출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산 ESS는 고율 관세와 세액공제 미적용으로 미국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해 최대 58.4%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올해부터는 중국 등 외국 '우려기업'(FEOC)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 정부도 배터리 산업에 대한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진출 확대를 위해 ESS용 배터리 품질인증 기준과 화재 대응 기술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ESS 중심의 수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이 최소 1~2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ESS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내 ESS 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ESS 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ESS 단지 건립을 주도할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540MW(메가와트), 금액은 1조원대로 예상된다. 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오는 2월쯤이 될 것 같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때 40%로 책정한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선 최대 50%로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과 사업 준비도 등으로 구성된다.

업계는 국내 생산과 국산 소재 조달 여부가 비가격 지표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2차 사업 모두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엔솔과 SK온은 이 사업을 따내기 위

해 LFP 기반 ESS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은 충북 오창공장 ESS용 니켈·코발트·망간(NCM)의 삼원계 배터리 라인을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하는 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K온도 충남 서산 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SDI는 LFP 대신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여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하다.

중국이 글로벌 ESS 장악...K-배터리 미 진출로 시장 재편 예상

향후 10년간 태양광·풍력 확대와 함께 매년 조(兆) 단위의 ESS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2차 입찰 결과가 국내 배터리 3사의 전략과 한국형 재생 에너지 전력망 모습까지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생산되고 밤에는 정지한다. 풍력발전의 경우는 바람이 강한 날과 약한 날의 차이가 크다. 발전량과 수요가 시간대 별로 변동하는 상황에서 ESS 없이 재생 에너지 비중을 끌어 올리면 계통 불안정, 주파수 변동, 송전망 혼잡 등 제반 문제가 불거진다. ESS는 이 간극을 메우는 장치다. 낮에 남는 태양광 전력을 ESS에 저장해 두었다가 밤이나 피크 시간대에 다시 방전함으로써 전력망의 흐름을 평탄하게 조절 할 수 있다.

풍력 역시 바람이 강한 시간대의 잉여 전력을 ESS에 저장, 전력 부하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재생에너지를 100GW(기가와트)까지 설치한다는 목표다.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선(6%) 등 중국기업들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지난해는 6%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북미 시장 진출을 계기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ESS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언론이 ‘내란몰이’ 하는 것 명백한 오류

대한언론 공정보도심의위원회 12차 회의



◆**서육식 위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발동이 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다수 언론들은 아직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단정해 보도하고 있다. 12·3 계엄이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은 12·3계엄을 ‘12·3 내란’ ‘윤석열 내란사건’ 등으로 표기해 ‘내란 몰이’를 하거나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

더구나 모든 형사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내란’으로 선불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좌파 매체는 말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매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12·3계엄을 ‘내란’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오류다.

내란죄는 국가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주권 행사가 배제된 국토 침탈, 강제적인 정권 탈취 등으로 인한 헌법질서 전복 같은 국헌문란이란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야 성립한다. 비상계엄 발동이 민주당의 줄 탄핵, 정부기관 특활비 전액삭감, 입법 폭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에 따른 대응수단 또는 단순한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라면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상의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계엄이 국회의 통제아래 있었고, 국회가 이를 해제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내란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심상대 위원** :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제목의 미확인 정보들이 요약본 형식으로 퍼지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16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수집한 4건의 신문·방송

보도 내용을 불공정 보도로 선정해 그 내용을 ‘대한언론’ 2026년 1월호에 보도기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들이 ‘내란몰이’ 보도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소 유리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언론은 그 근거의 하나로 캐나다 총리와 캐나다 장관이 실사 차 잇따라 한화오션이 있는 거제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평소 독일과 친분이 깊다.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계속 언론이 보도하면 독일은 긴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카드로 재무장 할 수도 있다. 한국은 폴란드와 호주 해양·방산 사업에서 연이어 패한 뼈아픈 추억이 있다. 여기에는 언론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전익식 위원** : MBC라디오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은 11월 29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었는데...국힘이 ‘통과’를 주도했다?”라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

진화에 나섰지만 언론이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

- ▲ 스쿨존 속도 하향
 - 가짜뉴스 내용: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하향된다.

정 계획이 없다.

경찰청은 이밖에도 횡단보도 접근시 무조건 일시정지나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된다는 등의 정보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온라인 떠도는 ‘새 교통법규’는 가짜뉴스

- 경찰청 팩트: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내가 원칙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km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

- ▲ 전동킥보드(PM) 사용 연령 상향
 - 가짜뉴스 내용: 전동킥보드 운전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상향된다.

- 경찰청 팩트: 도로교통법상 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며, 이를 만 18세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없다.

- ▲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가짜뉴스 내용: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 관련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03%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 경찰청 팩트: 경찰청은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를 0.02%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

너무 앞서가는 언론... 60조 원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망칠라

◆**조희곤 위원** :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수주전이 한국(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독일(TKMS)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한국 언론들이 마치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듯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독일을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확정, 오는 3월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도입 규모는 디젤 잠수함 8~12척으로 2030년까지 발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인 유지·정비·보수(MRO)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정부 예산의 10%에 육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문제는 국내 언론들의 다소 성급한 보도 태도다. 현재 여건은 한국이 다

성, 제17조 오보 정정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송은 이날 출연자인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 발언에 대해 “노웅래 전 의원의 1심 무죄, 그때 체포동의안 통과시키는 걸 주도했던 국민의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박한 발언을 내보낸 것.

그러나 노웅래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2022년 1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도 성치훈 부대변인이 “그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걸 주도했던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당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1964년 2월 서울대 졸업식서 근면·자립정신 강조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⑥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서울대 졸업식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정부의 시장개입을 반시장적이고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그동안의 비판은 시장의 본질인 차별적 선택기능을 몰이해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차별적 선택이라는 동태적인 창발적 발전을 이끄는 시장기능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충분히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시장의 불완전함을 제대로 통찰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적 선택 개입을 통해 시장기능을 보다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오히려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박정희 성공은 그의 강력한 시장친화적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폄하했던 박정희가 경제 성공을 이뤘다면 동시에 자원배분은 왜곡되었다고 하는 이율배반적 주장도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

박정희의 시장관은 복잡성 경제학이 비선형적 창발 현상으로서의 경제 발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통상 도입하는 시장의 진화적 특성과 동일한 관점이다. 복잡계 시장의 창발적 진화는 돌연변이(차이)가 일어나면 유용한 변이를 차별적으로 선택하면서 새로운 종의 증폭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석한다. 바로 이것이 나비효과의 생물학적, 혹은 경제 창발적 표현이다. 혁신가(개척자 혹은 선구자)라는 돌연변이가 생겨야 차별화라는 진화적 적자 선택이 일어나고 성공한 돌연변이의 경제 유전자가 전파되어 가난한 농경사회가 역동적인 산업사회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상에 접하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확인된 바가 없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쓴 것은, 아직까지는 민선 대통령 당선 직후인 1964년 2월 26일 서울대 졸업식 치사

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그의 집권 기간 중 가장 많이 쓴 이 말에 대해 (필자의 확인에 의하면) 주변 측근들조차도 대화를 통해 부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이 말 자체의 출처가 분명치 않다. 고대 희랍 시대라는 주장에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3인의 하인(혹은 달란트) 얘기가 연관된다는 주장이 있고, 서구 산업혁명의 자조 정신을 설교한 영국의 평론가 사무엘 스마일스의 1859년 “자조론”(일본어로 번역되어 100만 부까지 팔렸다고

신상필벌 정책 내세워 정부의 차별적 지원 강화

함)이 이 복음의 전달에 기여했다는 주장 등이 있다.

필자의 추적에 의하면 박대통령은 소학교 시절 구미 상모동 교회의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 공부와 웅변에도 뛰어났다고 하니 마태복음 얘기를 접했을 수 있겠지만 이를 바로 자조론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추후 사범학교와 일본육사 등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산업혁명기 일본의 베스트셀러였던 스마일스 “자조론” 번역서를 접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을 5·16 혁명 직후부터 60년대 농촌 독농가(篤農家)육성 사업을 옆에서 도운 고병우 전 장관의 회고에 의하면 항상 농민은 물론 국민의 자조 정신이 미흡함을 아쉬워하였다 하는데, 이런 지식과 경험이 녹아 박대통령 개인은 물론 한국 최고의 세계적 전매 특허가 된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앞세운 새마을운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2. 박대통령의 시장관의 철학적 배경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의 시장과 정부의 차별적 지원 기능에 대한 믿음은 서양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었지만, 이를 경제 정책 사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놀라운 성과까지 달성했다는 점이다.

이 사상은 노력과 성과의 다름과 차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보상과 지

(左丘明, 國語)과 “군자는 다름 속에서도 화합하여 이를 같게 만들지 아니하지만, 소인은 다른 걸 억지로 같게 만든다고 불화를 조장한다 (군자 화이부동, 소인동이부화: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는 명문을 남긴 공자(孔子, 論語), 두 사람의 철학에 집약된다고 하였다.

원도 차등화해야 시장이 작동하고 동기가 부여되어 성장과 발전도 가능하다는 통찰이다. 그러나 아직도 공정, 정의, 포용 등의 평등사상을 지상 명제로 생각하는 경제학 주류학계나 민주정치에서는 차등과 차이의 원인을 자기들한테서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자본주의니, 시장이니 남 탓을 하느라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세계 모두가 빠진 성장분배의 동반 악화가 바로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박정희의 성공원리에 대한 몰이해가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중국 진나라의 법가 사상의 진수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이 바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장관에 다름 아니다. 또한 얼마 전 중국 철학계가 유불선 통합으로 중국철학을 재정립한다고 그 진수를 찾아낸 것이 놀랍게도 박정희 사상에서 별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은 동양철학의 진수는 2500여년 전의 “다름 속에서 화합하면 새 생명이 생기지만 모두 같아지면 생명은 사라진다 (화실생물, 동즉불계: 和實生物, 同則不繼)”고 설교한 좌구명

이 들 동양사상이야말로 바로 박정희의 성과의 차이를 인정하여 상응하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세상이 화목해지고 경제가 창발하여 동반 성장도 가능해진다는 사상의 2500년전 버전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대경제학도 최근 들어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지만, 박정희의 성과 없으면 버린다 하고 살려내는 동기부여를 통해 그늘진 곳에서 양지로 탈출하도록 하는 창발적 경쟁 유도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마치 그냥 모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나눠주면 국민들이 모두 일어서리라는 나이브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그저 이러면 선거 때 표를 많이 주리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성과에 따른 차별적 보상이 없이 인간은 결코 성과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냥 나눠주는 정책은 모든 국민을 태업으로 유도하여 하향평준화의 길을 면치 못한다. 오늘날 결과든 기회든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세계 민주정치는 물론 기본소득을 내거는 경제학도 박정희의 사상을 좀 배워야 현실경제가 어디로 갈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회우 광장

“개가 죽으면 울어도 시어머니 죽으면 안 운다”



김휴선
본회 회우
전 MBC 보도국 부국장

헝가리 전 대통령 ‘노바크 커털린’이 저출산 문제로 최근에 우리나라에 왔다. 한국에는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많다고 일갈했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걸 보고 한 말이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닌다. 휴간에 어린애처럼 안고 다니거나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매년 반려견 윈드서핑대회까지 연다고 한다.

며칠 전 아들과 같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 ‘스타필드’에 갔다. 젊은 부부들이 어린애와 같이 유모차에 반려견을 태우고 다니며 쇼핑하는 걸 봤다. 이곳은 개를 데리고 다녀도 되느냐고 아들에게 물었다. 스타필드는 여느 백화점과 달리 반려견을 데리고 다녀도 된다고 한다.

회사의 상술이지만 그만큼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아파트 단지나 공원, 강변 그리고 야트막한 야산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개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반려견을 키웠다. 그러던 것이 근래들어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다닌다. 요즘은 자동차, 유모차, 백팩에 지고 다니는 것은 물론 어린 아이처럼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도 더러웠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다. 몇 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다. 최근 들어 길거리에서 커피잔을 들고 다니는 유행처럼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눈에 띈다. 하기가 서구의 문화가 날마다 들어와 우리의 문화를 쉽게 바꾸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는 많은 동물병원이 성업중이다. 줄잡아 전국에는 동물병원이 5,0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같이 사는 사람만도 1,400만 명에 이른다고



동물병원 성업...반려동물 애호가 1400만명

한다. 주로 동물 병원은 애완동물이 중심이지만 고양이와 햄스터 그리고 뱀 같은 양서류 심지어는 남방에 사는 희귀동물까지 있다. 이들 병원은 매매는 물론 치료에서부터 털을 깎는 미용에다 사료, 의상, 액세서리까지 없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해외를 가거나 장시간 휴가로 집을 비울 때는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맡기고 간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웬만한 호텔비와 비슷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 호텔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 뿐인가 반려견이 죽었을 때는 뒤

처리를 하는 ‘개 화장터’도 생겨났다. 이제 개는 집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한 가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여름, 아들 식구가 사는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큰 개를 좋아한다. 어쩌면 호신용도 되기 때문이다. 공원이나 유원지를 다닐 때는 개와 같이 다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완전히 한가족처럼 생활한다.

외출은 물론 행사장이나 모임 장소를 갈 때는 승용차로 같이 다닌다. 특히 공원이나 마을 주변을 산책할 때는 어김없이 같이 다닌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같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서양 사람들은 반려견이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는 매년 여름, 반려견 ‘윈드서핑대회’까지 연다고 한다.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지난 여름 한창 더울 때, 동네 그늘막에서 몇몇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모여앉아 어느 젊은 여성이 반려견과 같이 가는 걸 보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 울어도 개가 죽으면 운다”고 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시어머니를 경시하는 것을 빗대서 한 말 같았다.☞

송년시

겨울바다

바닷가엔
달이 떠 있었고
내가 있고
그리곤 아무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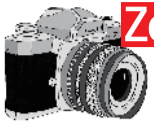
거기엔
모래 쏠리는
발자국 소리만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소라 껍질 침실에도
두런거리던 소리가
끊기고
불이 꺼졌다

밤새도록 가슴에 쌓인
파도소리가
구름보다 무거웠다

하늘엔 소리없이
별들이 지고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게 궁금했다.

장석영
시인·수필가



Zoom in

전통과 현대 잇는 '빛의 예술' 2025 서울빛초롱축제



서울 청계천·우이천 일대에서 개막된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17년째 도심을 밝히는 빛의 향연이다. '나의 빛, 우리의 꿈, 서울의 마법'을 주제로 청계천과 우이천에서 전통 한지 등(燈)과 미디어아트의 최초 융합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번 2024 서울빛초롱축제는 328만 명이 찾아와 역대 최고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주요 작품인 '시등의 순간', '빛의 오로라', '갓등', '청계의 빛' 등을 포함한 400점 이상의 빛 조형물들은 우리 모두가 품은 꿈을 빛으로 표현, 찾는 이들에게 환상적이며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하고 있다.

청계천은 각각 청계광장, 광통교, 광고, 장통교를 시작점으로 하는 4개 구역이 서로 다른 테마로 꾸며졌다. <사진:송창기 편집국장>

명품인생

향기 있는 새해 '화훼(花卉) 스토리'

어느 대기업의 입사시험문제에 '화훼'를 한문으로 쓰라거나 또는 한자 '花卉'를 읽어보라고 할라치면 제대로 답을 쓰는 이가 몇이나 될까 싶다. 화훼는 차라리 花卉라고 쓸 때 더 알기 쉬울지 모른다. 화훼의 낱말의 뜻이 무어나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쓸까.

화훼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꽃'이라고 하면 그만일 것이다. 영어로는 flowering plant. 본래는 초본식물의 꽃을 말하는데 넓은 뜻으로는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모든 식물'을 가리킨다. 밭에서 재배하면 노지화훼(露地花卉)요, 온실에서 기르는 온실 화훼가 있어 이 두 가지가 화훼원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훼를 종류별로 나눠본다면 화단용으로 과꽃, 여귀, 체꽃, 향유, 꽃향유, 꿀풀, 패랭이꽃, 동자꽃, 설앵초, 할미꽃, 돌나물, 은방울꽃이요, 분화용으로 석위, 복수초, 설앵초, 노루귀, 할미꽃, 금낭화, 매발톱꽃, 문주란, 노루발, 백리향, 제비꽃, 섬초롱꽃, 동백, 철쭉, 산철쭉, 해당화에 센달나무, 식나무, 송악, 팔손이, 단풍나무, 등나



무, 자귀나무요, 절화, 절지 및 절엽용으로 과꽃, 용담, 동굴레, 원추리, 붓꽃, 산국, 감국,

'칼라릴리' 처럼 아름다운 새해 맞기를

구절초, 상사화, 석산, 하늘나리, 솔나리, 수선화, 수수꽃다리, 조팝나무요, 정원수 조경용으로 동백, 진달래, 철쭉, 산철쭉, 제주참꽃, 수수꽃다리, 개회나무, 매자나무, 야광나무, 산사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털팽나무, 작

살나무 등 등 끝이 없다.

대충 우리가 좀 아는 것들의 이름을 올려봤는데 그래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저 이름만 죽 나열해도 향기가 감도는 것 같으니 이 달콤함을 즐기면 그만이다. 우리 곁에 이런 화훼가 있다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메마른 삶에 그윽한 향기를 뿜어주고 눈으로 보되 마음이 즐거운 것이 바로 이 화훼다.

이제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다. 새해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꽃은 무엇

일까. 순수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데이지가 사랑을 받는다. 이 작고 우아한 꽃은 새로운 삶의 탄생을 축하하고, "데이지처럼 신선하다"는 말에서도 드러나듯, 변화와 갱신을 의미한다. 새해가 시작될 때 데이지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1월에 자신을 위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데이지를 선물한다.

또한 새해의 꽃으로 '칼라 릴리'(사진)를 빼놓을 수가 없다. 'Calla Lily'라는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아름다움'을 뜻한다. 그만큼 칼라 릴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우아함 때문이다. 그 자체로 예술작품과 같은 존재감을 발산하지 않는가.

뉴스타트는 존재감의 무게를 지녀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1981년 힝클리로부터 저격을 받았다. 병원에 실려 가던 레이건의 한마디. "내가 영화배우였다면 총 안 맞아도 되는데..."

유머러스한 이 한마디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지지율이 8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82년, 3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자 보좌관들이 온갖 걱정을 할 때 레이건이 한마디 했다.

"걱정하지들 마라. 까짓거 지지율, 내가 총 한 번 더 맞으면 되지."

<강이산·극작가>

오!내고향 경상남도 고성(固城)

청정해역 한려수도 자연산 식감 뛰어난 생선회 '천하일미'



심의표
본회 회장

역시 AI 시대다. 고향 고성에 대한 글 자료를 모으기 위해 ChatGPT와 Gemini에게 '고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첫 단계에서부터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남한에만 다섯 군데의 '고성'이 있는데 어느 '고성'의 자료가 필요하냐고 되묻는다. 필자의 고향인 경남 고성(固城) 외에 강원도에 고성군(高城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주도에도 두 곳의 고성(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이 있고 대구광역시에도 북구에 고성동(古城洞)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AI에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다.

'고성의 역사와 문화, 자랑거리는?'이라는 몇 마디를 물어보기 무섭게 "고성 땅은 수천 년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수많은 인재와 총절의 흔이 대를 이어 빛나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는 요란한 너스레를 늘어놓은 뒤, 삼한시대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에서부터 소가야(小伽倻) 도읍지 고대사를 거쳐 임진란 당항포 대첩 역사를 순식간에 쏟아낸다. 이어서 '고성의 볼거리, 먹거리?'하고 묻는 순간, 내 눈은 휘둥그레지고, 정신마저 어쩔어쩔해진다. AI가 퍼날라주는 뭉텅이 자료를 나로서는 도저히 불감당임을 깨달았다.

앗차! 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리다간 'AI가 주위섬기는 자료의 짜깁기, 께맞추기 글이 되고 말겠구나!' 인터넷이나 AI가 제공하는 자료야 언제,



자란만의 절경.

어디서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고성에서 태어나고 고성에서 자라나 지금도 고성을 자주 오고 가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알짜배기 고향 얘기를 찾아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세계최고의 '회 맛'을 보시려면 '경남 고성'으로 오시죠!

내 생각으로는 생선회가 최고의 맛을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그 첫째 조건이 물고기가 사는 바닷물이 맑고 깨끗해야 한다. 우리나라 남해안, 한려수

(협수로)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고 섬 주위에서는 소용돌이치는 입체적 흐름을 가지고 있다. 거센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근육이 발달하여 식감이 단단하고 맛있어진다. 지구촌 바다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최상의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 이곳 말고 또 있겠는가? 신의 손이 빛은 천하제일의 비경 '자란만'

고향자랑을 실컷 해보라 하니 큰맘 먹고 한 번 냅다 내질러 보자. 필자의 과문 탓일 수도 있겠지만, 천하제일의 선경을 보기를 원한다면 단연 경남

는 역시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꼽힌다.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 중의 한 곳인 고성에는 해안을 따라 2,000개가 넘는 공룡 발자국이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신비를 간직한 채 바닷가 바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매년 고성 당항포에서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 축제는 공룡을 좋아하는 전국 어린이들의 눈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음은 2년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상왕국 소가야의 왕릉유적인 고성을 송학동 고분군이다. 아울러 임진왜란 국란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왜선 57척을 전몰시킨 제 1,2차 당항포 해전의 승첩지인 당항포구와 조선시대 잣은 왜구의 침략을 막아낸 고성읍성과 소을비포성지(所乙非浦城址)도 고성인들의 강한 호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역사의 유적들이다.

또한 고성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는 이름을 얻은 데는 풍류와 서민들의 해학·애환을 담고 있는 '고성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와 '고성농요(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연화산 천년고찰 옥천사(玉泉寺)와 무이산 문수암(文殊庵)도 고성을 찾는 사람에게 꼭 권하고 싶은 명소이다.

고성군 마암면에는 '장산숲'이라는 특이한 명소가 있다. 이곳은 600여년 전 퇴계선생의 한 제자가 정자와 못을 만들고 숲을 조성한 곳으로 몽환적이면서 아름다운 숲 분위기 때문에

'신의 손'이 빛은 자란만 풍광 뛰어나

도가 어떤 바다인가? 지난 1970년부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식품의약품)가 인증한 청정해역(Clean Water)이 바로 이곳이 아니던가. 두 번째로 물고기가 몸을 많이 비빌 수 있는 수초, 해조류가 많이 자라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바다에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야 하고 해안선 모양새가 복잡해야 한다. 들쭉날쭉 리아스식 해안선에

섬들이 부지기수로 늘어서 있는 다도해, 한려수도가 바로 제격이다. 세 번째로 빠질 수 없는 조건이 조류의 흐름이다. 남해안의 조류 특징은 동서로 왕복하며, 좁은 물길

고성군 하일면 학동리 앞바다 '자란만'을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 '자란만'을 굽어볼 수 있는 해발 418m 높이의 좌이산(左耳山 : 용의 왼쪽 귀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에서 내려다 보는 '자란만'의 비경은 아무리 봐도 지상의 풍광 같지가 않다. 맑고 푸른 한려수도 바다에 뿌린 듯, 심은 듯 보석처럼 수도 없이 박혀 있는 크고 작은 섬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운 좋게 바다안개까지 드리운 아침이나 석양이 붉게 물든 저녁시간에 좌이산에 올라 자란만 비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한 번, 행운의 빅카드를 뽑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

주저리주저리 자랑투성이 고성

다시 AI에게 경남 고성의 최고 자랑거리 열 가지를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다. 필자도 생각했듯이 첫 번째

"구르미 그린 달빛", "녹두전" 등 유명 드라마의 촬영지가 된 곳이다.

'고성'하면 빠뜨릴 수 없이 의례 따라붙는 "인물의 고장, 고성"이라는 별칭에 관해서는 글 끝마무리로 몇 마디 언급할 수밖에 없다.

고려 후기, 당대 최고의 문필가이자 송설체(松雪體)의 대가로 이름을 떨친 명필 행촌(杏村) 이암(李巖) 선생 이후, 근·현대에 이르도록 경남 고성이 배출한 정·관·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인물은 정말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오죽하면 한때 경남 지역에서는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소위 계급 이상의 군 장교를 고성사람이 싹쓸이하듯 차지한다'는 우스개 섞인 말까지 돌았을까?

고향 고성 자랑을 늘어놓다 보면 언제나 양어깨가 으쓱 으쓱! - 이처럼 신나는 일이 더 있을 수 없다. ☞



회우 칼럼

‘K푸드 열풍’ 지구촌 휩쓸고 있다

이탈리아 피자·파스타 제치고 ‘비빔밥’ 검색 순위 톱



최명우
본회 유튜브 방송 위원장
전 동아일보 편집위원

요즘 놀랍게도 K푸드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처 이럴 줄 몰랐던 상황이다.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것 중에 간편식으로 우선 파스타 피자과 샌드위치 등이 첫 손에 꼽힌다. 파스타나 피자는 세계의 기호식이자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명물이다. 그런데 구글의 지난 ‘2023 트렌드 검색어 순위’ 레시피 부문 1위엔 쉽게 예상하기 힘든 메뉴가 올랐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인 ‘비빔밥’이다.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비빔밥이 세계 수많은 음식 가운데서도 2023년 기준 가장 높은 검색 증가율을 보인 요리로 꼽힌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난 얘기 중의 하나다. 그때 이미 K푸드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영국 잡지 ‘타임아웃’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의 언급량 빅데이터를 기준으로 조사했더니 ‘한식이 이탈리아 음식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됐다’고 보도했다. 언제부턴가 뉴욕타임스(NYT)에도 한식 이름이 잇달아 등장했다. 최고의 요리 특선 중에 뉴욕의 한 한식당에서 제공하는 ‘물회면’이 톱에 올랐다. 한국인에게도 낯선 물회에 면을 추가한 것이 ‘인기 요리 8선’에 돼 지곰탕도 올랐다. 국내에선 돼지국밥으로 불리는 것이다.

K푸드 돌풍은 한 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매운 음식’, ‘김치’라는 특정적 선입관에 치우쳐있던 사람들에게 김치한국적 다양한 음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음식이란 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맛보는 정도다. 그런데 한식이 그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의 일상 입맛에 자리하게 됐다. 도대체 왜?

K푸드 열풍의 공신으로 먼저 K콘텐츠를 말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



K-푸드 컬처 앰버서더가 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김밥과 냉면에서 불닭소스까지.

이 오스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 바람이 불었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불닭볶음면 등의 레시피 역시 큰 화제가 됐다. 이같은 인기를 타고 라면 수출액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핫도그는 원래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먹거리다. 월드시리즈 가을 막바지 경기에 열광하던 관중들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오돌 오돌 떨고 있었는데 그때 등장한 것이 불에 따뜻이 구운 소시지였다. 구운 소시지를 빵에 넣어 판 이 생똥맛

와 호감도가 70%를 상회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식을 다시 먹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0%나 된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K푸드 품목으로 치킨, 김치, 비빔밥, 라면 등이 꼽힌다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신드롬이 여전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의 OST는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렇다면 바람 탄 케데헌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들은 무엇일까. 영화 초반부에서 케이팝 주인공 트리오 헌트릭스는 컵라면을 잔뜩 쌓아놓고 공연 전 파이팅 타임을 가진다.

김밥, 라면, 국밥 등 <케데헌>에는 다양한 K-푸드가 등장해 세계인의 침샘을 자극한 것이다. 요즘은 그 케데헌 속 K-푸드를 먹으러 서울의 시장, 거리, 맛집으로 관광객들이 모인다.

초반부 헌트릭스의 ‘폭풍 먹방’은 아는 맛이어서 더욱 침을 꼴깍 삼키게 한다. 뚝배기에 담아내는 어묵꼬

K-POP ‘케데헌’ 돌풍 업고 K컬처 K파워 떨쳐

글로리’ 등에 등장한 김밥도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원래 김은 서양에서 기피식품으로 괘시를 받았다. ‘블랙 페이퍼’라며 외면을 하자 김은 밥 속으로 숨어 들어가 ‘누드김밥’으로 탈바꿈했다. 그 김밥의 김이 환골탈태했다.

김밥 열풍과 더불어 조미김 등도 인기를 얻으면서 김 수출 역시 조 단위를 돌파했다.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기록으로 꼽힌다.

핫도그, 만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핫도그의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핫도그의 모국이 미국인데 한국의 핫도그가 세계의 인기품목으로 정상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현상이다.

은 먹거리를 처음 본 기자가 ‘핫도그(HOT DOG)’라는 이름을 붙여 보도했다. 이 소시지가 포장에 개가 그려진 제품이었기에 기자가 그냥 ‘뜨거운 개포 소시지’라고 했던 것이다.

그 핫도그가 한국에 와서 튀김옷을 입은 꼴이로 변신하면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중이다. 미국, 유럽 등에선 ‘콘도그’(코리안 핫도그)로 불리며 인기 치솟는 중.

K푸드 열풍은 지금 한식의 세계적 인지도와 소비 확대를 이끌며 한국 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드라마, 영화, K팝 등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는데 실제로 한식에 대한 인지도

치, 초록색의 옛 분식집 그릇에 담긴 순대와 떡볶이, 김밥, 호떡, 냉면... 기운이 달리자 멤버들은 설렁탕을 함께 먹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와 김밥, 오뎅 등 ‘K-분식’을 골고루 시켜먹는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케데헌을 보고 궁금증을 못 이겨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한다.

K푸드는 아니지만 미국을 거쳐 한국에 상륙한 멕시코푸드는 서울에서 텍스멕스(Tex-Mex)라 불리며 붐을 일으키고 있다. 텍사스에서 변화된 멕시칸푸드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텍스멕스가 한국에서 K-Mex(한국식 멕시코요리)로 변화하며 또한 세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K푸드의 K파워로 무장한 탓이다. ☐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11.26 ~ 2025.12.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고수웅(2022~2024) 90,000	김동철(2025) 30,000
김성배(2017~2019) 90,000	김수남(2022) 30,000
김우상(2022) 30,000	김제응(2022) 30,000
남선현(2022~2024) 90,000	박경열(2022~2023) 60,000
박응칠(2024) 30,000	봉두완(2017) 30,000
서광식(2022) 30,000	이동화(2024) 30,000
이영일(2023~2025) 90,000	이용(2026~2029) 120,000
이우진(2026) 30,000	이종문(2023) 30,000
인보길(2019~2022) 120,000	정종표(2020~2022) 90,000
조덕연(2024) 30,000	최명우(2024) 30,000
호천웅(2023~2024) 60,000	홍인표(2021~2022) 60,000
최영배(2020~2022) 90,000	허남세(2022) 30,000

회우가 낸 새책

아시아 작가들 '어머니' 이야기 신상성 편



아시아 작가들의 '어머니' 주제로 단행본을 꾸몄다. 아시아 작가들은 '어머니'를 각각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작품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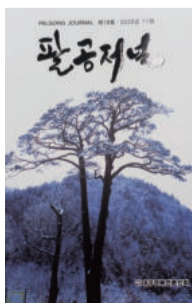
이 책은 "동양 특히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특유의 공통적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이들 특유의 우주적 생명감 '孝'(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햇빛을 받아 그 땅에서 자식으로 태어남) 사상에 대해 자상하게 서술했다. 한국작가로는 유자효, 장석영, 최창영, 김용길, 정관정, 유채준 등의 글을 담았다. 아시아예술출판사 발행 264쪽 18,000원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가이드북 '사례로 본 신문윤리 가이드북'을 펴냈다. 이 책자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반 사례를 모아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실제 심의 사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윤리실천 항목마다 관련 사례와 문제점, 신문윤리위 결정 등을 정리해 "마감에 쫓기면서도 독자와 사회를 향한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기자"들에게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꾸몄다. 위원회는 올바른 저널리즘 활성화를 위해 윤리적 보도문화 확산과 언론신뢰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발행 242쪽 비매품

팔공저널 사단법인 대구경북언론인회 출간



대구경북언론인회가 그동안 발간해오던 회지의 제호를 '팔공저널'로 바꾸고, 모양도 4x6배판에서 국판으로 바꿔 제7호를 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는 대구와 경북지역 전 현직 언론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사단법인체다. 태동한 지 18년째를 맞은 이 단체는 언론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통하여 언론문화를 창달하고, 지역언론의 선진화와 지역사회 화합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제호를 바꾼 뒤 처음 발간된 이번 회지에는 대구경북 언론계 현안으로 떠오른 대구경북언론인회관 건립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특집으로 실었다.

회우동정

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 대상 수상



장석영 본회 명예회장이 제24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명인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장 회장은 수필집 '할미꽃 당신'을 명인대상공모에 출품했는데 문화예술창달과 평화통일 기원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 수필 부문 창작문학상 받아



한영탁 본지 자문위원(수필가)이 종합문학기 「문학저널」 2025년 창작문학상(수필부문)을 받았다. 수상작인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다-어느 사학자의 6·25일기」는 서울대 김성철 교수가 저술한 「역사 앞에서」를 읽고 쓴 중수필(重隨筆)이다. 시상식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5시 서울 종로2가 통일빌딩 3층 '문화공간 온'에서 있었다.

춘사 국제 영화제서 사상자로 참석



김두호 회우(본회 부회장)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강남구 LG아트홀에서 거행된 한국영화인협회가 주최한 제29회 춘사 국제영화제에서 영화 감독상 수상 양윤호 감독 시상자로 참여했다. 김 회우는 제15대 한국영화협회장을 역임했다.

클래식음악 이해 '새 음악감상법' 강좌



최명우 회우(음악평론가·전 동아일보 편집위원)는 2016년 1월부터 동아일보 동우회에서 매월 1회 '클래식음악 즐기고 이해하기'를 주제로 한 '새 음악감상법'을 강의한다. 참가자는 동아일보 동우회원 및 가족친지, 초청자들이다.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이창열 회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30

강남마을 한라비발디 905동 1504호

김선기 회우 서울 강남구 학동로 607 청담 르엘 아파트 108동 2401호

언론가 소식

관훈클럽, 총무 이하원씨 선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지난해 12월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73대 총무에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를 선출했다. 1월11일부터 1년 동안 관훈클럽을 이끌 이 신임총무는 조선일보 워싱턴·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사에는 김선걸 매일경제 논설실장과 김희준 YTN 해설위원이 선출됐다.

한국신문협회 신문발행인 송년 오찬

전·현직 발행인들의 모임인 신문발행인 포럼 송년 오찬이 지난해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47명의 전·현직 발행인들이 참석했다.

다문화 정책대상 후보 추천 2월27일

세계일보(발행인 이기식)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후원하는 제13회 다문화 정책대상 후보를 오는 2월 27일까지 추천받는다. 시상식은 3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SBS 사우회 신년교례회 1월 8일 개최

SBS 사우회는 지난해 12월 1일 서울마포가든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사우회는 신년교례회를 오는 1월8일 오전11시 등촌동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한다.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튼튼하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튼튼 탄탄 든든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O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O스포츠단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